

경영기획실 2003 주요업무보고

I.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

1. 지방분권 추진
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정에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
- 이를 위해, 『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』를 중심으로 시·도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추진

<지금까지 추진사항>

- 정부의 동향
 -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(03. 7. 4) : 7대 분야 20개 과제
 -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과제별 T/F를 구성, 연구검토
 - 지방분권특별법을 국회상정(03.10.21), 심의중
- 시·도의 추진현황
 - ① 서울시 추진
 - 46개 지방분권 과제 발굴·건의 : '03. 3.21
 - 『지방분권 기획·자문단』 설치·운영 : '03. 5. 2
 -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의견제출 : '03. 8.11
 - ② 시·도 공동 추진
 - 『지방분권특별위원회』 구성 및 기금조성(5.2억) : '03. 5.15
 - 지방분권 35개 과제를 발굴·건의 : '03. 6.27
 - 35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(12월말 완료예정)
 -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관련, 시·도 공동안 마련, 건의 : '03. 6.27

<앞으로 추진계획>

- 추진방향
 - 지방재정권 확충 과정에서 우리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논리개발 및 정부와 협의
 - 지방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추진
 -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
- 추진계획
 - 자주재정권에 대한 서울시(안) 마련
 - 지방교부세율 인상(15→18.3%)보다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에 역점
 - 지방소비세 신설, 지방소득세 도입,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
 - 지방소비세 신설시 서울시 세입이 타 시·도로 이전되지 않도록 대안 검토·마련
 - 교육자치, 자치경찰에 대한 시·도 공동안 마련
 - 정부안은 2006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, 지방종합행정 실현을 위해서 조기실시 추진 → 2004년 법제화, 2005년 실시
 -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무·기능 재배분 계획 수립
 -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이관 또는 유사·중복기능의 조정



- 정부의 지방분권추진과 연계하여 시·도가 공동대응
 - 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,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강화
- 지방분권실시에 대비하여, 자치단체의 제도·조직 정비 추진

2.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

- 정부에서는 2012년 행정수도이전을 목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

□ 정부의 추진계획

준비 단계
(2003년까지)

- 『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』 제정
- 기본방향 설정 및 입지선정 기준 마련

계획 단계
(’07년 6월까지)

- 입지선정(2004년)
- 개발계획 및 토지매수(2005~2007년 상반기)

건설 단계
(2011년까지)

-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
- 신행정수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

이전 단계
(2012년부터)

-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및 주민이주

□ 우리 시 대응체계 구축

-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『수도발전기획단』 구성(’03.9.24)
 - 총괄·재정팀, 도시계획팀, 산업경제팀, 역사문화팀 등 4개 팀 운영
- 『수도발전자문위원회』 구성·운영(’03.10.30)
 - 경제, 문화, 통일, 도시계획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
 -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및 수도권 발전 자문

□ 추진사항 및 계획

-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타당성 연구(’03.11월~’04. 1월)
 - 신행정수도 건설 타당성 검토 및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 분석
 - 수도이전보다 효율적인 수도발전 등 국가균형발전 대안 연구
 - 동경, 베를린, 호주 캔버라 등 해외사례 수도이전 분석 검토
- 서울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개최(’03.11월)
- 수도권 발전을 위한 3개 시·도(서울, 인천, 경기) 협조 강화
 - 수도권 시·도의회간 연대,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
- 수도발전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미나, 시민대토론회 등 개최

서울시의 입장

- ①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중대사로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함
 - ② 통일 후에 다시 이전해야 하는 낭비와 불행이 없도록 통일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
 - ③ 국가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
 - ④ 막대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조달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됨
- ➔ 따라서, 신행정수도 건설은 통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고되어야 함

II. 지하철부채 감축

1. 서울시 부채 현황

□ 부채 총괄 - 6조 2,533억원(2002. 12. 31 기준)

○ 일반부채	1조 1,537억원(18.5%)
○ 지하철부채	5조 996억원(81.5%)
- 건설부채	4조 2,857억원
- 운영부채	8,139억원
(지하철 부채에는 서울시 재투기금 용자액 6,347억원 미포함)	

- 국내외별
 - 국내부채 : 5조 5,678억원
 - 외화부채 : 6,855억원 - 양키본드, 사무라이본드, IBRD차관 등

□ 지하철 부채 - 5조 7,343억원

- 서울시 외부부채(5조 996억원) + 서울시 재투기금융자(6,347억원)

	계	건설부채	운영부채
계	57,343 (100%)	48,306 (84.2%)	9,037 (15.8%)
지하철건설본부	8,533 (14.9%)	8,533	-
지하철공사	29,035 (50.6%)	22,446	6,589
도시철도공사	19,775 (34.5%)	17,327	2,448

2.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추진

□ 기본방향 - 2006년까지 건설부채 절반으로 감축

- 서울시 대외 신용도를 제고하여 저금리 외화 도입, 상환부담 완화
- 지하철 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재산정하여
 - ①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하고
 - ② 운영부채는 공사가 노조, 시민들과 함께 경영쇄신을 통해 해결

□ 추진성과

- 고금리 부채차환(2003. 2. 23) : 485억엔(5,335억원)
 - 연이율 4~4.75%의 OECF차관을 저리(평균금리 0.775%)의 사무라이본드로 차환
- 2002년 세계잉여금 활용 지방채 상환 : 5,464억원
 - '03년3~6월 도래만기원리금상환 : 2,265억원(외화부채 조기상환 5억원 포함)
 - 도시철도공채 조기매입 상환 : 3,199억원(이자절감효과 : 607억원)

'03년말 부채 상황

○ 부채의 신규도입 없이 1조 2,482억원의 원리금 상환
○ 원금기준 1조 345억원의 부채감축으로 '03년 말이면 부채가 3조 7,961억원으로 감축
- 4조 8,306억('02년말) → 3조 7,961억('03년말)

□ 지하철 건설비 정부지원 추진

- '91~'97지하철건설비 지원율을 타 시도와 같게 상향지원(25% → 40%)
 - 정부가 서울시에 소급지원할 금액은 1조 3,375억원임

- 지하철건설비 국고지원액 중 융자금의 보조금 전환
 - 2기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액 중 융자금으로 지원한 5,154억원을 국조보조금으로 전환토록 건의



○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2004년 도래 원리금 343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에 있음

□ 향후계획

- 세계잉여금 발생시 상환일정에 관계없이 상환가능한 부채 상환
- 도시철도공채 발행대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차입 억제 및 운영부채 상환 지원
 -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인하 (4% → 2.5%, 시행일 : 2004. 1. 1)
- 구조조정, 요금현실화 등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부채 증가 억제

※ 지하철 부채 장기전망

구 분	'02년말	2003	2004	2006	2008	2010
계(억원)	57,343	52,980	46,880	39,229	25,463	14,305
건설부채	48,306	37,961	30,250	22,043	8,354	349
증 감	-	△10,345	△7,711	△8,207	-	-
운영부채	9,037	15,019	16,630	17,186	17,109	13,956

Ⅲ. 건전재정 운용

1. 예산절감 추진

- 일하는 방식 개선·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통해 예산절감
- 절감된 예산은 주요시책사업, 지하철 부채 감축재원으로 활용

□ 절감목표 : 5,390억원

- 세입증대 - 2,006억원
 - 지방세 수입은 과학적 세원관리와 체납징수 강화로 증대
 - 세외수입은 민간경영기법도입을 통해 증대
- 세출예산 - 3,384억원
(예산배정·계약·집행단계로 구분하여 예산절감 추진 -)
 - 예산배정단계 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물량 조사
 - 계약 단계 :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, 계약방법 결정
 - 사업집행단계 :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설계변경, 신공법 도입 등

□ 절감실적('03.6.30현재) : 3,546억원(목표의 65.8%)

- 세입증대 : 1,461억원(72.8%)
- 세출절감 : 2,085억원(61.6%)
- 절감된 예산은 2004년 예산편성,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

□ 향후계획

- 매년 5,000억원의 절감을 목표로 원가계산,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지속 절감 추진

2.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

-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
-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여 기금의 효율성 제고

□ 기금 폐지 : 14개 기금 → 12개 기금

-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('03. 9.25)
 - 서울특별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업무를 이관
 - 공무원교육시상기금 폐지('03.11. 5)
 -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
 - 기금자금 운용
 - 1년 이상 장기자금을 통합·운용
 - 여유자금 9,012억원 중 3,662억원 통합운용(이자수입 7억원 예상)
 - 1년 미만의 단기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 운용('03.11월부터)
 - 향후계획
 - 여유기금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
 - 정기예금 외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국공채·회사채 등 투자대상 다양화
 - 기금관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금 수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
3. 지방재정의 투·융자사업 투자심사

- 투·융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투자사업 효과의 극대화

- 투자심사 기능 및 관리 강화
 - 투자심사 전담팀 구성 운영('03. 1월)
 - 투자결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: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사업
- 진사항
 - 투자심사 대상사업
 -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
 - 자치구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
 -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
 - 투자심사 결과 : 195건 심사(정기 2회 100건, 수시 4회 95건)

구 분	계	적 정	조건부추진	재 검 토	반 려
건 수	195	26	148	20	1
금액(억원)	55,739	5,509	44,262	5,947	21

- 향후계획
 -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시범 도입
 -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신규 투자사업
 - 투자사업 추진 모니터링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
 - 투자결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

IV.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

1.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

- 시민들의 주관적인 평가인 『시민만족도조사』의 한계를 개선
-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평가하는 『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』를 도입 시행

- 서비스품질평가제 개요
 - 평가대상 : 7개(민원·청소·상수도·지하철· 시내버스· 시립병원· 보건소)
 - 평가방법
 - 소비자 평가부문 :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

-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1:1 면접조사와 출구조사
- 전문가 평가부문 : 행정서비스 제공체계
 -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평가, 현장확인 및 인터뷰 실시
- ➡ 위 두 평가부문을 합산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산정

□ 추진사항

- 품질평가모델 개발 : '02.12월 ~ '03. 6월
- 품질평가기관 선정 : '03. 8월 ~ 9월
 - 소비자 부문 : 한국갤럽 외 2개사(컨소시엄)
 - 전문가 부문 : 서울시정개발연구원
-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중 : '03. 9월 ~ 12월

□ 향후계획

-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: '03.12월
- 평가결과 시정 피드백 : 우수 기관(자치구포함) ·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

2.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

-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계화된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고,
- 업무별, 개인별 목표달성도를 진단·평가하여 성과와 실적중심의 책임경영시정 정착

□ 추진사항

- | | |
|---|--|
| 성과관리계획 작성
↓
성과주의예산 편성
↓
목표설정
↓
집행(목표수행)
↓
성과측정 및 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계획 수립('03. 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목표 121, 성과목표 346, 단위사업 1,413개 ▶ 기능, 사업, 활동별 예산으로 편성 ▶ 1~4급 공무원 224명(목표수 738개) ▶ 실·국·본부 및 과단위 조직에서 사업 추진 ▶ 평가위원회(5개 소위원회) 구성·운영 ▶ 정기 평가 3회, 수시평가 1회 실시 ▶ 평가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: 현재 시스템 개발·보완중 |
|---|--|

□ 향후계획

- '03년 성과평가 및 '04년 성과관리계획 수립
- 평가정보시스템(EIS) 운영 : 저비용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
- 평가인센티브제 도입·시행('03년 연1회 → '04년 연2회)

V. 시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

1. 행정심판 활성화

- 시민의 권익 침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고
-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정의 신뢰성 제고

□ 행정심판 재결현황('03.10월 현재) : 377건

계	인 용	기 각	각 하
377건	56(14.8%)	228(60.5%)	93(24.7%)

□ 주요 개선·추진 사항

-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60일내(법정기간 : 90일내) 재결
-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권집행정지 결정제도 활성화 : 총 35건(인용 7, 기각 27, 각하 1)
- 행정심판 청구인의 공격·방어를 위한 구술심리 적극 허용 : 27건
- 위법·부당한 처분의 사전예방 강화
 - 행정심판재결레짐 발간(1,300부), 법률교육(81명) 등

향후계획

-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회수 확대 및 공정하고 신속한 재결실시
- 구술심리 확대 및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도모
- 처분전 법률자문 확대 및 법률교육 지속 실시로 권리침해 사전 예방

2.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

- 소송사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시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권익 침해 예방

소송수행 상황

- 수행건수 : 총 768건 (행정 277, 민사 491)
 - 행정 : 토지수용 56, 도시계획·건설 63, 교통 32, 주택·건축 10등
 - 민사 : 손해배상 137, 부당이득 95, 소유권이전 47, 손실보상 31 등
- 승소율 : 86.2%(행정 : 86.7%, 민사 : 86.0%)

주요 개선·추진사항

- 승소·패소사건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소송 수행업무에 적극 활용
 - 『소송진행상황보고』 운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강구
 - 『소송수행평가제』의 운영 강화로 적극적 소송수행
- 시정판례집 발간 및 실무교육 실시
 - 시정판례집 발간(1,500부), 소송실무교육(160명) 등

향후계획

- 제기된 소송의 효율적 수행 체계 확립
 - 소송단계별 철저한 송무심사,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적극활용 승소율 제고
- 승소·패소사건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소송 수행업무에 적극 활용
- 『중요소송 지정제도』 운영을 통해 종합적·체계적 대처
 - 고문변호사·유관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송대책회의 운영

3.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강화

-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및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로 자치법규의 완성도 제고 및 법치시정 기반 구축

자치법규 정비 : 연 2회(3월, 9월)

- 정비대상
 - 주요시책 추진의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항
 -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·불편초래 등 불합리한 사항 등
- 정비실적 : 총 180건(조례 97, 규칙 74, 훈령·예규 9)

자치법규 입법체계 강화

- 자치법규 입안시 『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』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입법시스템 정착
- 입법부서의 기본방침 결정단계부터 사전협의 및 자문제공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정당성 및 효율성 제고

- 조례규칙심의회 활성화 : 월 1회 이상 정기 개최(21회 개최)
- 향후계획
 - 『자치법규 입안실무 자료집』을 활용 체계적인 자치법규 실무교육 실시
 - 불합리한 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·정비

VI. 위원회 운영·활성화

-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구성 추진
-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성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지도·감독 강화

- 위원회 정비·운영
 - 위원회 정비 및 신설억제를 통하여 50개 이내에서 지속 관리
 - ※ 위원회 현황(2003.10월 현재) : 42개(법령 25, 조례 17)
 -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12개 위원회 통·폐합 및 폐지
 - 통·폐합 : 서울시민대상운영위원회 등 5개
 - 폐지 : 상징물관리위원회 등 7개
 - 여성 30%이상, 시민단체 20%이상 위원 위촉
 - 외부위원 1,096명 중 여성 328명(30%), 시민단체 225명(21%) 위촉
- 민원성 위원회 운영 개선
 - 위원회 개최주기 대폭 단축 및 정례화로 시민편의 제고
 - 위원회 심의 결과 즉시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향상
 - 심의안건 사전배부, 위원 인력풀 구성 등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
- 향후계획
 -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, 합리적인 위원 구성,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지속 추진
 - 민원성 위원회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,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

VII. 전국 시·도지사 협의회 운영

- 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·도간 교류·협력을 강화하고
- 지방분권·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사항을 공동추진

- 추진사항 - 2회 개최, 13개 안건 협의
 - 제11회 협의회 - 2003. 5.15(서울)
 - 시·도지사협의회 「지방분권특별위원회」 및 「지방분권기금」 설치 등
 - 「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」 개최
 - 제12회 협의회 - 2003. 8.21(경주)
 - 지방재정, 환경 등 시·도 제안안건 및 현안사항 협의
 - ※ 전국 시·도지사 간담회 개최 : 4회
 - 지방분권추진 시·도 공동대응 합의('03. 4.23)
 -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지방분권기금 운용계획 협의('03. 6.14)
 - 대통령 주재 시·도지사회의 관련 사전회의('03. 9. 7)
 - 지방분권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계획 협의('03.10.10)
- 향후계획
 - 단기적으로는 행정협의체 회의 정례화, 조정·합의사안 이행 담보 확보
 - 장기적으로는 광역행정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재원 확보

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

업 무 명	추 진 실 적
계절별 종합대책 수립·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날종합대책 : '03. 1.27 ~ 2. 3 ○ 여름철 종합대책 : '03. 6.15 ~10.15 ○ 추석 종합대책 : '03. 9. 5 ~ 9.15 ○ 겨울철 종합대책 : '03.11.15~'04. 3.15
수도권 3개 시·도지사 간담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 시 : '03.10.2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용차자율요일제 공동참여, 버스환승할인제요율 단일화, 신교통카드시스템 공동 활용 등 합의 - 수도권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『법인성격 공동기구』 설치방안 검토 합의
시의회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질문 : 5회, 10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질의답변 : 의원 51명, 315건 ○ 요구자료 : 2,422건
국정감사 수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개 위원회 : 행정자치(10. 6), 환경노동(10. 7), 건설교통(10. 9) ○ 요구자료 : 2,444건 ○ 질의답변 : 54명, 296건
경영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확대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 완료 : 7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동노인종합복지관, 광진노인종합복지관 - 중부여성발전센터 - 시민안전체험관 시설관리용역, 시민안전체험관 청소용역 - 한강공원 둔치청소,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등 ○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시행 준비 : 5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파노인전문요양원, 중랑노인전문요양원,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- 중랑(용마)청소년수련관, 동부병원 등
공무원제안·시민창안 제도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3년도 공무원제안·시민창안 접수·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 : 총 459건(공무원제안 226건, 시민창안 233건) - 상반기 심사(118건) : 채택 1건(동상)

업 무 명	추 진 실 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규제개혁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존규제 정비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19 398 1358 517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규제사무수</th> <th rowspan="2">존치</th> <th colspan="3">정비대상 업무</th> <th rowspan="2">정비완료</th> </tr> <tr> <th>소계</th> <th>폐지</th> <th>완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142</td> <td>297</td> <td>845</td> <td>465</td> <td>380</td> <td>843(99.8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직능단체와 현장 워크숍을 통한 규제사무 발굴 정비 : 50건 ○ 신설·강화규제 심사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19 629 1358 824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원 회 개최회수</th> <th rowspan="2">신설·강화 법규수</th> <th colspan="3">규제사무수</th> <th colspan="3">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</th> </tr> <tr> <th>신설</th> <th>강화</th> <th>존치</th> <th>원안 가결</th> <th>수정 의결</th> <th>부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회</td> <td>16</td> <td>16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20</td> <td>2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규제사무수	존치	정비대상 업무			정비완료	소계	폐지	완화	1,142	297	845	465	380	843(99.8%)	위 원 회 개최회수	신설·강화 법규수	규제사무수			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			신설	강화	존치	원안 가결	수정 의결	부결	7회	16	16	4	2	20	2	-
규제사무수	존치			정비대상 업무				정비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계	폐지	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142	297	845	465	380	843(99.8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 회 개최회수	신설·강화 법규수	규제사무수			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신설	강화	존치	원안 가결	수정 의결	부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회	16	16	4	2	20	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경예산 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편성 : '03. 9. 4 ○ 2003 추경예산 (단위 : 억원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51 976 1305 1137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2003 추경예산</th> <th>기정예산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144,905</td> <td>126,867</td> <td>18,038</td> 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 <td>103,287</td> <td>86,804</td> <td>16,483</td> 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 <td>41,618</td> <td>40,063</td> <td>1,55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주요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철부채 감축 : 4,483억원(1,747억 → 6,230억) - 주요시책사업 : 1,380억원 서울숲(뚝섬)조성 등(24억), 시청주차장 녹지조성(16억), 수해항구(652억), 주차장확충(398억), 지역균형발전(60억) - 조기마무리사업 : 1,811억원 아리랑길 등 도로개설(223억), 운수업체지원(455억) 마포자원회수시설(200억), 전동차내장재교체(1,041억) 	구 분	2003 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합 계	144,905	126,867	18,038	일반회계	103,287	86,804	16,483	특별회계	41,618	40,063	1,555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2003 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144,905	126,867	18,0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103,287	86,804	16,48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41,618	40,063	1,5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치법규 온라인시스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일 평균 방문건수 : 600여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 380명(63%), 시 공무원 220명(37%) ※ '99. 7월 서비스 개시이후 총 75만여 건 접속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일 평균 : 12명 상담 (총 2,970명 상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사 1,922, 가사 394, 행정 342, 형사 173, 상사 139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3년도 목표관리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표관리대상 : 224명 738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3급 공무원 : 49명 183개, 4급 공무원 : 175명 555개 ○ 목표달성도 평가 : 매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○ 결과 활용 : 성과연봉(3급 이상) 및 성과상여금(4급)산정기준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업 무 명	추 진 실 적
사업소 성과평가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대상기관 : 4개 분야 44개 사업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사업소 11, 정수사업소 6, 소방서 21, 도로관리사업소 6 ○ 평가기간 : '03. 1월 ~ 3월 ○ 대상업무 : 2002년도 추진한 사업의 성과 전반 ○ 평가방법 :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○ 평가결과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사업소 인센티브 지급 : 총 14개 기관(사업소당 200~500만원) -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: 시장표창(14개 기관 및 직원)
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기간 : 2003년 ~ 2007년(5년) ○ 추진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·국별 조정 및 채원 조정 : '03. 5월 ~ 9월 -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: '03.10월
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 모집공고 : '03. 7.23 -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LG CNS컨소시엄) : '03. 9.18 - 사업시행 합의서 체결 : '03.11.03 ○ 기대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택시요금 지불, 인터넷을 통한 충전 등 시민편의 증진 - 시간거리병산제 도입 등으로 대중 교통정책 수용

2003년 예산집행 현황

□ 집행총괄(2003.10월말 현재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집 행 률(%)
계	27,209,485	17,641,260	63.8
기 획 담 당 관	8,883,256	6,946,201	78.2
조 직 담 당 관	9,831,518	7,701,173	78.3
예 산 담 당 관	4,100,120	356,033	8.7
법 무 담 당 관	3,125,451	1,784,224	57.1
심사평가담당관	1,203,640	791,666	65.8
재정분석담당관	65,500	61,963	94.6

□ 주요사업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 산 액	집 행 액	집 행 륜 (%)
○ 의회 및 국정감사 종합관리 등	200,100	156,786	78.4
○ 서울시 의정회 지원	163,825	163,825	100
○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	8,900,000	7,140,963	80.2
○ 행정서비스 품질평가	916,600	590,597	64.4
○ 예산절약성과금 운영	3,855,000	196,000	5.1
○ 법령정보이용료,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입료, 소송비용 등	2,203,871	1,394,544	63.3